

농어촌공사 전남, 청년농 농지 확대...임대 농지 1.8배 늘린다

이창우 기자

720ha 공급·80% 청년 배정...'선임대후매도' 92억 투입
지원 면적·소유 기준 완화로 영농 진입장벽 낮춰



나주시 지원으로 구축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시스템.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청년 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사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물량을 전년 대비 1.8배 늘려 최대 720헥타르(ha)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를 장기간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에도 92억원을 투입해 청

년농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지원 면적 한도를 폐지하고 농지 매입 지원 대상 기준이 되는 소유 한도를 5ha 이하에서 6ha 이하로 확대했다.

사업별 지원 규모도 늘어나 공공임대는 최대 7ha, 선임대후매도와 농지매매는 최대 1.5ha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영농 단계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전남본부는 올해 공급 예정 임대 농지 720ha 가운데 80% 이상인 575ha를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고령화된 농촌 인력 구조의 세대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은 "청년 농업인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우 기자(lcw@newsis.com)